

2015韓國金融學會
春季學術發表資料

韓國의 Google 稅 導入方向

日 時：2015. 06. 05

場 所：商工會議所

發表者：中央大 姜哲勝

Contents

1. 問題의 認識
2. 韓國의 경제현황
3. Google 세 추진배경과 개념
4. 先進國의 Google 세 추진동향
5. Google 세 한계와 OECD BEPS 프로젝트
6. 韓國의 Google 세 추진 정책방향
7. 참고문헌

1. 문제의 인식

우리나라는 과거 초고속 인터넷 망의 확산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력과 든든한 자국 지원을 등에 업은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속속 진출함에 따라 현재 국내 ICT 산업은 안타깝게도 그 성장 동력은 물론 시장성과마저 서서히 외국에 넘겨주고 있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국내 ICT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적절히 발동되어 각종 국가행정의 재원이 되어야 하지만, 최근 유럽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구글세 논쟁 비단 다른 나라만의 문제인가?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2년에 이미 4,400억 원에 달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유명 해외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 결과적으로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조세감면에 앞서 정확하게 매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더 문제. 한국 세법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실제로 구글은 한국에서 작년에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1. 문제의 인식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애플, 스타벅스, 버거킹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초미의 관심거리이며,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영국 하원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부도덕한 탈세 행위를 질책한 바 있으며, 최근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한국은 이와 같은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다 작년 12월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세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제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조세감면 지원의 이면에는 적절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더구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각종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외국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결국은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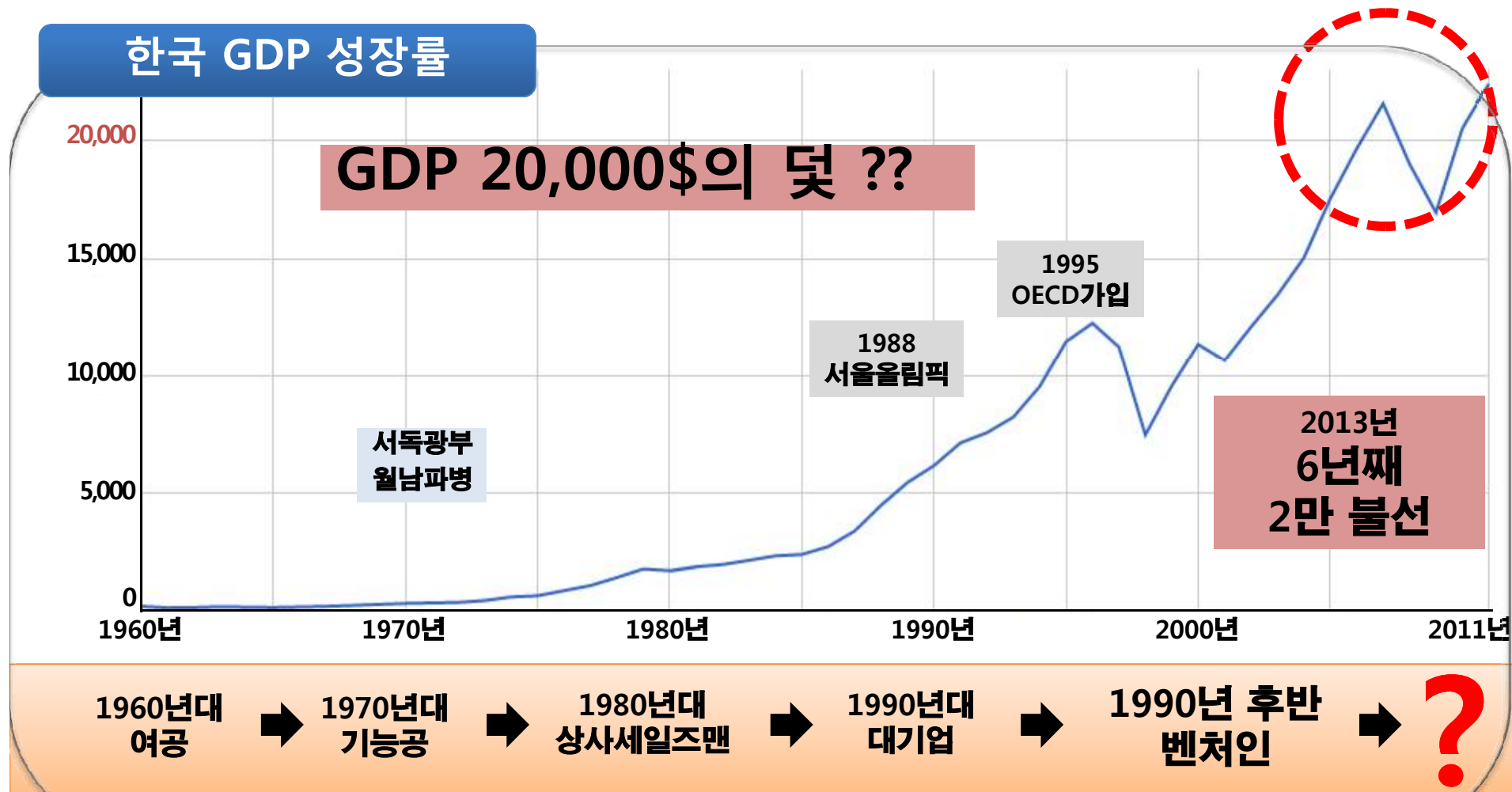
그러므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정보자원 및 ICT 산업에 대한 정부 리더십을 확인하고, 국내 ICT 산업이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ICT 시장성과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에 관하여 추진배경과 현재 상황분석 한 후 국내 ICT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구글세 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韓國의 경제현황

가.한강의 기적, 지속가능한가?

한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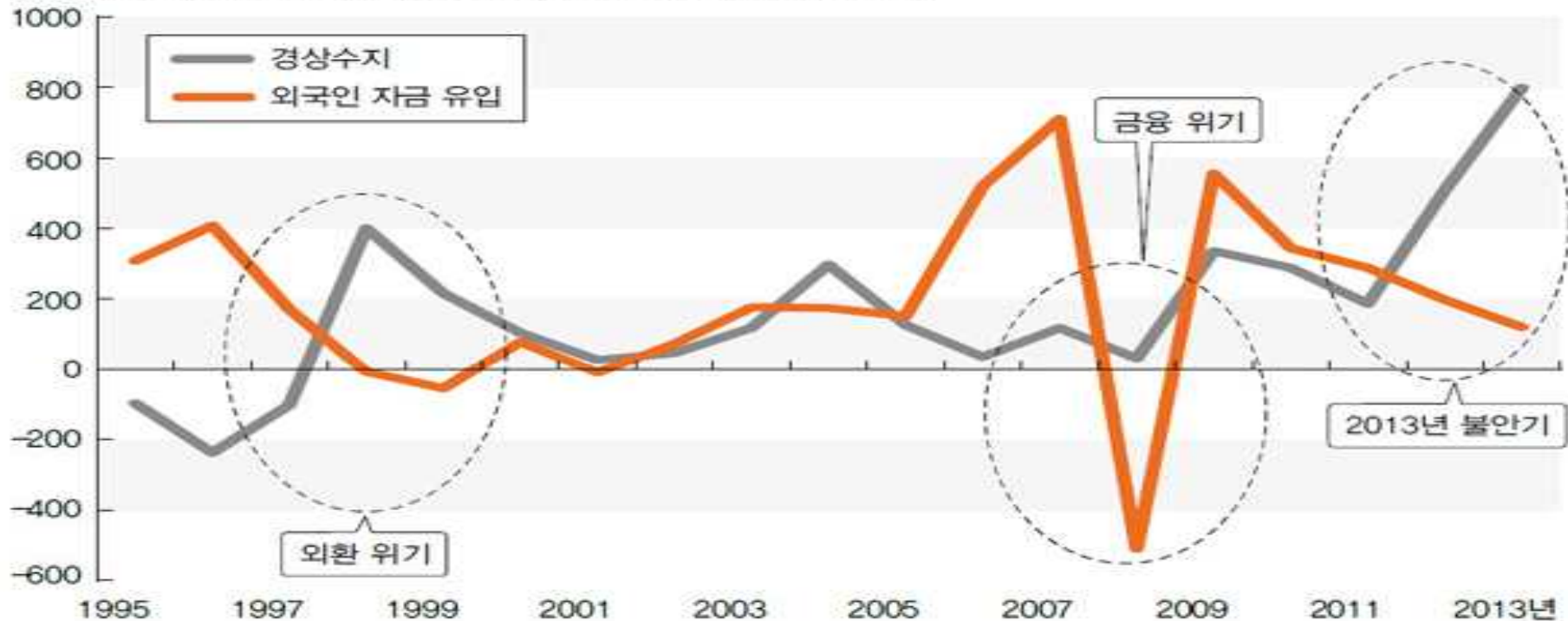
자료: 이민화(2013)

나.한국의 경제위기설, 실체를 제대로 직시해야?

국내경상수지와 외국인 자금유입추이성장률

국내 경상수지와 외국인 자금유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국제수지(외국인 자금유입은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차입의 합 기준)



10년 주기의 위기설 고개, 1997년 외환위기 '지급불능 위기' 2008년엔 '외화 유동성 위기' 대외불안 보다 내적 문제 주목을 - 가계 빚 급증에 따른 소비. 투자 침체, 엔 약세 광적 우려에 의구심, 진짜 위기는 중국 발 가능성 높아

자료: 한겨레 신문(2014.11.10)

다.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한국 GDP 순위



룩셈부르크 경제지표

1인당 국내총생산 (GDP) 순위

단위: 달러·2013년 기준

1	룩셈부르크	11만 573
2	카타르	10만 4655
3	노르웨이	10만 1271
4	스위스	8만 275
5	오스트레일리아	6만 4156
9	미국	5만 2839
18	독일	4만 3952
23	일본	3만 9321
33	한국	2만 3837



유럽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단위: %·2012년 기준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



룩셈부르크로 들어온 해외직접 투자(FDI) 추이 단위: 달러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OECD, 룩셈부르크 경제부

라. 세계가 더 놀란 ‘한강의 기적’



자료: 한국경제(2014)

피터 드러커 :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제외하곤 20C 역사를 논할 수 없다.
 한국 50간 성과 : 1억 \$ 수출하는데 307일 - 210분 소요, GNI 255\$ -26,205\$
 도시근로자가두월평균소득 5,990₩ - 502만₩ 천배, 수출 1억1,950만\$-5,596\$
 주식시장: 1956 : 4억₩-1977 1조₩ 1933 - 100조₩ 2013 - 1,186조₩
 GDP 7,11억₩ - 1,428조₩, 농림어업 : 36% 제조업 : 13% 1964년 무역수지
 2억8,529억\$ 적자, 50년 전 원조받는 국가 -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화

3. Google 세 추진배경과 개념

가. 추진배경

유럽 각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 야후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 프랑스9), 독일10), 호주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법인세율이 적은 아일랜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 11) 전략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고 비난12)

○ 이와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하여 유럽 각국은 이를 ‘구글세’ 라는 명목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시장 변동과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계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보 검색사이트 eJustice 등 3개 업체, 그리고 그 후에도 여행전문 사이트 Expedia, 영국 온라인 지도 사업자 Streetmap 등은 구글이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부당한 독점행위를 했다고 EU에 공식 제소

특히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일어났는데, 특히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는 2006년 구글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연합이나 유럽 각국은 구글에 패소 판결 도출했고, 벨기에의 경우 위의 소송에 대해 2007년 벨기에 법원이 언론사의 사전허락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구글 검색사업의 검색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해 EU와 자국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가 빈발

3. Google 세 추진배경과 개념

영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Foundem,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의 Ciao, 프랑스 법률정보 검색사이트 eJustice 등 3개 업체, 그리고 그 후에도 여행전문 사이트 Expedia, 영국 온라인 지도 사업자 Streetmap 등은 구글이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부당한 독점행위를 했다고 EU에 공식 제소

특히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일어났는데, 특히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는 2006년 구글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연합이나 유럽 각국은 구글에 패소 판결 도출했고, 벨기에의 경우 위의 소송에 대해 2007년 벨기에 법원이 언론사의 사전허락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럽 각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 야후 등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구글 검색사업의 검색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불공정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해 EU와 자국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가 빈발

영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Foundem,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의 Ciao, 프랑스 법률정보 - EU는 2010년 7월부터 3년 동안 구글의 검색 중립성 문제에 대해 불공정 혐의 조사 진행, EU 경쟁당국은 구글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글이 제시한 개선안을 받아들여 합의 종결(2013. 4)했으나 유럽 각국의 반발은 계속5)

3. Google 세 추진배경과 개념

EU는 2010년 7월부터 3년 동안 구글의 검색 중립성 문제에 대해 불공정 혐의 조사 진행, EU 경쟁당국은 구글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글이 제시한 개선안을 받아들여 합의 종결(2013. 4)했으나 유럽 각국의 반발은 계속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글의 독과점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 벤더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구글의 서비스 이용규정이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해 2013년부터 Microsoft, Fair Search 등 17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 2013년 유럽위원회(EC)에서 구글의 독점금지법위반 조사

최근 포르투갈 앱마켓 사업자인 앱토이드(Aptoides)도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EU에 제소(2014. 6)하는 등 EU 내 구글시장 독점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확대 이와 같은 마찰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유럽 각국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부재와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 저하 문제와 직결됨.

유럽은 인터넷, 모바일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업이 부재하여 미국 중심의 구글, 야후, 애플 등의 다국적 기업에 지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디지털 전환이 늦은 인쇄매체 중심의 신문, 출판 콘텐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 위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 등의 조세 회피 문제 제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 재정의 고갈 속에서 세계 각국들이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인터넷, 디지털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를 문제 삼기 시작했음

법인세율이 평균 20~30%인 유럽에서, 영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영국 매출액 32억 파운드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조세 회피 문제를 지적

- 프랑스9), 독일10), 호주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법인세율이 적은 아일랜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 11) 전략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고 비난12)

○ 이와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하여 유럽 각국은 이를 '구글세'라는 명목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시장 변동과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계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보 검색사이트 eJustice 등 3개 업체, 그리고 그 후에도 여행전문 사이트 Expedia, 영국 온라인 지도 사업자 Streetmap 등은 구글이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부당한 독점행위를 했다고 EU에 공식 제소

특히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일어났는데, 특히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는 2006년 구글의 뉴스검색 서비스를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연합이나 유럽 각국은 구글에 패소 판결 도출했고, 벨기에의 경우 위의 소송에 대해 2007년 벨기에 법원이 언론사의 사전허락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 패소 판결을 내렸다.

3. Google 세 추진배경과 개념

- 프랑스9), 독일10), 호주도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법인세율이 적은 아일랜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 11) 전략으로 조세 회피를 한다고 비난12)

○ 이와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조세회피 문제에 직면하여 유럽 각국은 이를 ‘구글세’라는 명목으로 조세를 징수하여 시장 변동과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콘텐츠 산업계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보 검색사이트 eJustice 등 3개 업체, 그리고 그 후에도 여행전문 사이트 Expedia, 영국 온라인 지도 사업자 Streetmap 등은 구글이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해 부당한 독점행위를 했다고 EU에 공식 제소

특히 유럽 신문사 중심으로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일어났는데, 특히 벨기에 언론협회인 Copiepresse는 2006년 구글의 뉴스 검색 서비스를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없이 도용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유럽연합이나 유럽 각국은 구글에 패소 판결 도출했고, 벨기에의 경우 위의 소송에 대해 2007년 벨기에 법원이 언론사의 사전허락없이 Google News를 통해 기사를 노출시킬 수 없다며 Google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 구글세 개념: 현재 두 가지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1) 저작권료 관점의 ‘구글세’

먼저 유럽에서 구글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독점 행위에 대해 각국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특히 뉴스 기사검색을 통해 트래픽 유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이를 ‘구글세’로 명명함.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① 직접세 관점: 구글, 애플 등의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 법인들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을 세율이 높은 나라 법인들에서 세율이 낮은 나라에 설립한 법인으로 몰아 세금을 줄이는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 조작을 통해 세금을 회피(tax planning)하는데 대해 이를 세금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구글세’로 명명함.¹⁶⁾

② 간접세¹⁷⁾ 관점: 최근 들어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 앱 등의 역외 판매에 대해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판매세(Sales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부가세(Value Added Tax)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구글세’로 부르기도 함.

위의 두 가지 논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등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로서 이들에 부과하고자 하는 세금을 통칭하여 ‘구글세’로 부름.

4. 先進國의 Google 세 추진동향

3.1 프랑스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프랑스는 2005년 대표적인 뉴스매체인 AFP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개별 신문사 차원의 유사 소송과 프랑스 언론협회(IPG) 차원의 집단 대응이 이어져 그 결과 2012년 10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콘텐츠 이용료 및 사이트 접속료 지불 계약에 대한 해결책 요구 2013년 2월 1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구글과 공식 합의에 이를 구글은 프랑스에서 구글세 신설을 막기 위해 ‘종이매체의 디지털 매체로의 진화 지원’을 위한 6,000만 유로(8,2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출판혁신 펀드’ (Digital Publishing Innovation Fund) 조성에 합의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프랑스는 2010년 구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세’ (일명 ‘구글세’) 도입을 시도 ‘온라인 광고세’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구글 프랑스 지사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프랑스에서는 세금을 내지않고 있는 점을 비난하면서 도입을 주장한 것: 프랑스 정부는 구글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에 근거를 둔 회사(France-based company)가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온라인광고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의 1%를 온라인 광고사업자에게 조세로 부과하는 ‘온라인 광고세’ (간접세) 도입을 결정함.

-2010년 12월 29일 ‘온라인 광고세’의 신설이 포함된 2011년 재정법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통과함: 온라인 광고세’의 세수는 5,000만 유로로 예상되었으며 이중 4,500만 유로가 구글에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4. 先進國의 Google 세 추진동향

4.2 독일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독일은 저작권법(Leistungsschutzrecht) 속의 ‘구글세’ 관련 법안 국회 통과 2012년 독일은 저작권법 속에서 ‘구글세’ 관련 법안 발의, 2013년 3월 하원과 상원 통과, 법제화 됨. 이법은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일정 정도 길이 이상의 뉴스 콘텐츠의 발췌(news extracts)를 노출시킬 경우 그에 대한 로열티를 저작권자에게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보조저작권(ancillary copyright)’ 개념이 깔려 있음 - 하지만 이 법은 뉴스 콘텐츠의 ‘발췌’가 뉴스 제목인지, 어느 정도 길이를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유, 무료 저작권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여 논란이 됨 - 이 법의 통과 후 구글은 독일 뉴스 저작권자들의 뉴스콘텐츠를 Google News에서 지우고, 다시 종전처럼 아무런 보상없이 Google News의 리스트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가 신청을 함. ○ 독일에서 구글을 대체할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부재로 인한 정보의 흐름 저해, 후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성장을 막는 부작용의 가능성 초래 지적 - 이로서 독일의 ‘구글세’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계속적으로 구글의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4. 先進國의 Google 세 추진동향

4.3 스페인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독일은 저작권법(Leistungsschutzrecht) 속의 ‘구글세’ 관련 법안 국회 통과 2012년 독일은 저작권법 속에서 ‘구글세’ 관련 법안 발의, 2013년 3월 하원과 상원 통과, 법제화 됨. 이법은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업자가 일정 정도 길이 이상의 뉴스 콘텐츠의 발췌(news extracts)를 노출시킬 경우 그에 대한 로열티를 저작권자에게 내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보조저작권(ancillary copyright)’ 개념이 깔려 있음 - 하지만 이 법은 뉴스 콘텐츠의 ‘발췌’가 뉴스 제목인지, 어느 정도 길이를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유, 무료 저작권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여 논란이 됨 - 이 법의 통과 후 구글은 독일 뉴스 저작권자들의 뉴스콘텐츠를 Google News에서 지우고, 다시 종전처럼 아무런 보상없이 Google News의 리스트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가 신청을 함. ○ 독일에서 구글을 대체할 디지털 유통 플랫폼의 부재로 인한 정보의 흐름 저해, 후발 온라인 사업자들의 성장을 막는 부작용의 가능성 초래 지적 - 이로서 독일의 ‘구글세’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계속적으로 구글의 독과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4. 先進國의 Google 세 추진동향

4.3. 스페인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스페인은 독일의 선례를 따라 2014년 10월 30일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스페인에서도 오랫동안 신문사업자들이 구글이 아무런 보상 없이 뉴스를 무단 사용한 것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계속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함. - 스페인의 최대 신문협회인 AEDE는 Canon AEDE를 통해 구글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4년 10월17일 상원 승인을 거쳐 10월 3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음.

- 스페인 정부는 뉴스 콘텐츠 발취(news extracts)의 범위와 길이 등의 불명확한 문제로 ‘구글세’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패한 독일의 경험을 거울삼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스페인은 아예 뉴스 콘텐츠 발취(news extracts)도 저작권과는 ‘떨어질 수 없는 권리’ (‘inalienable right’ , ‘derecho irrenunciable’)라는 개념을 법안에 넣고, 이를 이용한 제3자에게 추가부담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은 또 만약 저작권료 지불없이 뉴스를 발취하거나 링크를 걸 경우 30만 유로에서 60만 유로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음25)

- 스페인의 경우 수익 악화로 고전 중인 스페인 신문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법안 통과 후 신문업계가 8000만 유로(약 108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측

4. 先進國의 Google 세 추진동향

4.4. 호주

1)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호주에서는 2011년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Malcolm Turnbull에 의해 10억 달러~1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호주시장에서 올리는 구글이 법인세는 781,461달러 밖에 내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공론화 함.27)

- 이에 대한 구글의 답변 거부로 호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 착수
- 이때부터 소득세법(income tax) 속에 국경을 넘는 이전가격(cross-border transfer pricing) 관련 규정을 엄밀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OECD의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규정을 3년여에 걸쳐 실효성 있게 계속 개정함28) 이후, 호주 구글의 법인세는 2012년 620만 달러, 2013년 707만 달러로 2011년에 비해 10배로 뛰었음. - 하지만 아직도 구글 호주의 검색서비스 매출은 호주가 아닌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짐29)

4.5 일본

1)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 일본은 해외기업(구글, 애플 등)의 일본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에 대해 소비세(Consumption tax) 부과 방침을 밝힘.

- 이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서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전자책, 음악에 대해 2015년부터 새롭게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5. 구글세의 한계와 OECD의 BEPS 프로젝트

5.2 OECD의 BEPS 프로젝트

1) 추진 배경 :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금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등의 증세 노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구글, 스타벅스, 애플 등 다국적기업들의 낮은 실효세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BEPS, 세원 잠식과 이익 이전)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

- 영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의 성격³³⁾
- 특히 디지털 경제하의 다국적기업들인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은 해외 각국들 간의 조세 관련법, 협정 등을 이용하여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축소하여(tax planning) 세금 탈루
- 디지털 경제가 심화되면서 온, 오프라인 영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B2B, B2C, C2C 등)에 따른 사업 형태가 가능해지면서, 물리적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이도 타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주지국에도 과세되지 않는 사업구조가 발생함.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빠른 발전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세 체계 미비의 문제점을 국가간 공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2) 추진 경과 : 2012년 6월 OECD 재정위원회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종합적 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

- 2012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진행사항을 보고해줄 것을 요청
- 2013년 2월 OECD는 BEPS 실태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보고서 작성,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 2013년 4월, OECD는 종합적 Action Plan 1차 초안 제시
- 2013년 7월, OECD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종합적 Action Plan을 완성하여 발표
-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 G20 회원국들의 승인

○ OECD는 BEPS Action Plan을 위한 Task Force를 2013년 9월 설립.

- 2015년 12월을 최종 추진시한으로 정하고, 1차 2014년 9월, 2차 2015년 9월, 3차 2015년 12월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

5. 구글세' 의 한계와 OECD의 BEPS 프로젝트

5.1 구글세의 한계

1)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유럽 각국에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가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함

- 독일, 스페인 등은 법제화가 최근에 이루어졌으나 독일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스페인은 법제화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글세' 의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음.

- 벨기에, 프랑스 등은 구글과 기금(fund) 마련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단계

유럽에서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는 계속 진행 중 - 현재 유럽연합 의회에서 구글 검색서비스를 다른 상업적 서비스와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가결하여 다시 이 문제는 유럽연합과 구글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쟁점화 될 예정.32)

- 앞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구글의 독점 문제가 다시 부각되어 쟁점화 될 전망

2)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최근 들어 '구글세' 징수 움직임은 조세 회피 관점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 회피의 문제는 각국의 조세관련 법과 국가 간 협정 등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나 조세 체계는 각국의 내재적, 외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풀리기 어려운 문제가 내포되어 이에 OECD를 중심으로 각국의 합의 도출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OECD 프로젝트가 BEPS Action Plan Project 임.

6. 韓國의 Google 세 추진 정책방향

1. 세계 각국은 콘텐츠산업을 육성,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구글세’, 문화세, 인터넷광고세 등 다양한 조세 형식을 통해 시도하고 있다.
2. 한국의 경우도 201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경필의원에 의해 유럽의 구글세와 문화세등을 통해 광고콘텐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에 관하여 추진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등을 3.
3. 구글세가 추진된 배경은 유럽 각국에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구글의 독과점 문제제기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구글의 신문기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각국내,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어나 구글이 패소하는 사태 발생하고. 이는 유럽 각국들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부재와 콘텐츠 기업들의 수익 저하 문제와 직결된다.
4. 더불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 등의 조세 회피 문제 제기했다. ‘구글세’는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진행됨
5.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와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 구글세’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문, 출판 등 콘텐츠산업의 지원 기금을 위한 재원으로 논의됨
6.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논의는 독일, 스페인의 경우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하였고, 벨기에, 프랑스의 경우는 구글과 콘텐츠산업을 위한 기금 마련안에 합의.
논의 필요

6. 韓國의 Google 세 추진 정책방향

7. 조세 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한계에 봉착.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발의에 의한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의해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세계 적으로 공론화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

- 이 문제는 두가지 관점에서 공론화 됨: 첫째, 직접세인 법인세 문제, 두 번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문제

- 법인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세법상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많은 시간과 절차 필요, 하지만 부가세 문제는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국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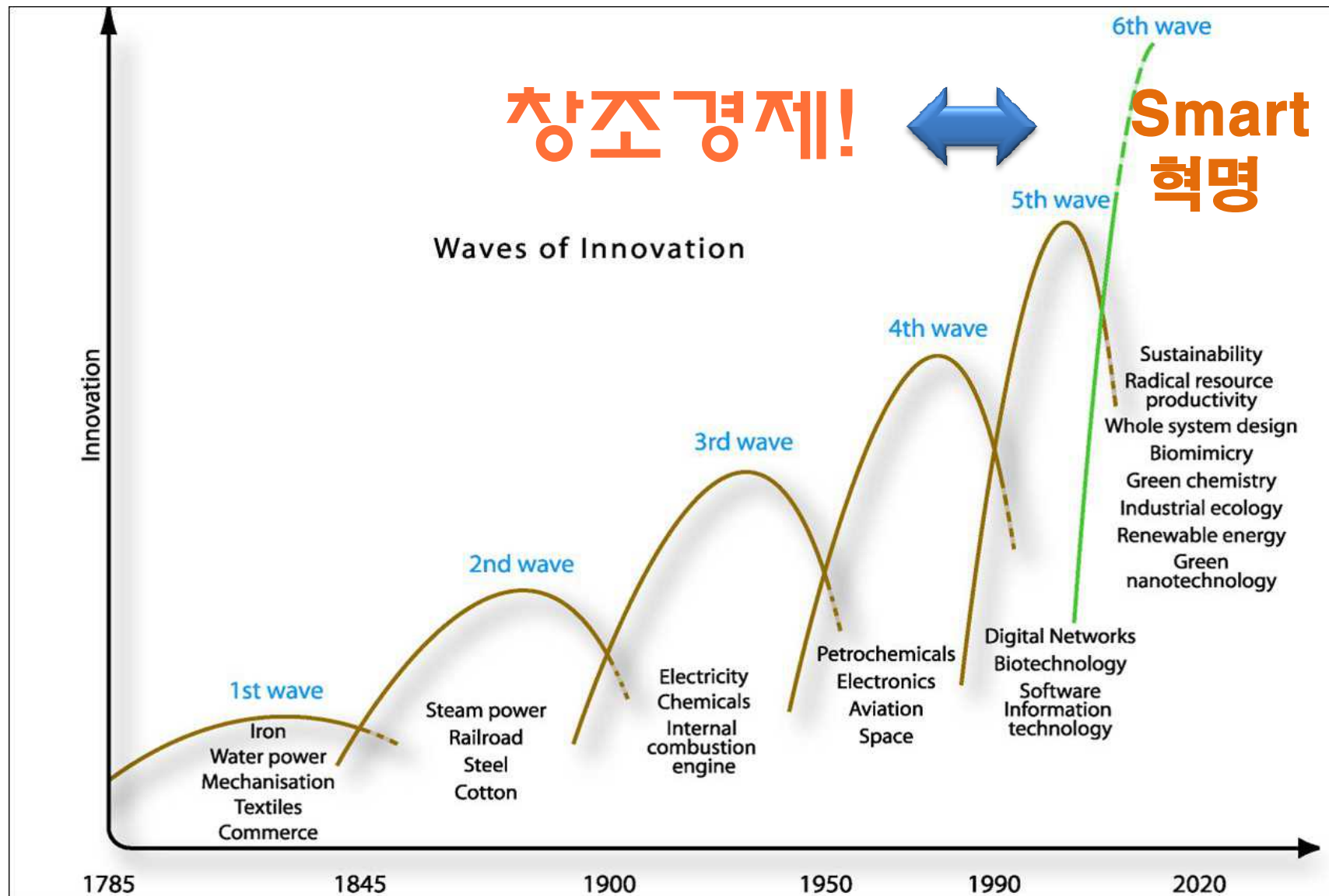
8. 국내의 경우, ‘구글세’ 논의는 공론화되고 있지 않음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 : 이미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인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 들에 콘텐츠사용료 지급, 하지만 구글의 경우 미지급.

-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 기재부의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9. 9. 9. 2015년 7월부터 구글,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 징수 예정, 하지만 법인세 문제는 전혀 공론화되고 있지 않음. 위의 두가지 관점의 ‘구글세’에 대한 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가 요구됨

10. 2015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여론 조성을 통한 구글 등의 법인세 과세, 그리고 저작권료 콘텐츠사용료 관점의 구글세징수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논의 필요

21C 스마트 혁명과 창조경제 효과



자료: 이민화(2013)

參考文獻

- 권호영,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원 확충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8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 개정안', 2014. 8. 6.
- 김영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산업진흥 기금: 상상콘텐츠 기금과 프랑스 '문화세'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vol. 14. no. 2.
- 김태호,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OECD Korea, 2014. 04
- 김태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과 조세정의의 실현", OECD Korea, 2014. 09. 19
- 박종수, '플랫폼 산업에서의 규제 형평성 확보 위한 정책 제언',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 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14. 09. 18
- 세계법제정보센터, 서유럽, 프랑스,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
- 안종석,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07
- 안종석,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7. 9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Google과 유럽 정부간 '구글세'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방향", 'KCA 동향과 전망', 통권 제63호, 2013. 06
- 스트라베이스, NewsBrief, 2014. 02. 25., News Brief, 2014. 10. 06
- 경향신문, "'구글 독주' 방치한 정부에 인터넷업계 '부글'", 2014. 10. 26.
- 디지털 타임즈, 2014. 12. 03
- 전자신문, 2014. 09. 17
- 조선비즈, "구글세 받는 스페인 언론 "뉴스는 공짜 아니다" ", 2014. 11. 05., 2014. 11. 27
- 조선일보, 2014. 08. 21
- 하윤금(2014), 'Google Tax 동향과 콘텐츠산업에의 시사점',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포커스 2014-10호(통권 87호)', 2014.12.15.
- ACCA, 'The digital economy: OECD's consultation on tax challenges', 2014. 06.
- Bernard Pulle, "Tax avoidance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 Australian Government initiatives to avoid erosion of corporate tax base", Parliament of Australia.
- <http://bigstory.ap.org>, "Google faces up to image problem in Europe", 2014. 05. 30
- <http://theregister.co.uk>, "Australia to reveal tech giants' tax tricks", 2013. 04. 03
- James Vincent, "Spain's 'Google Tax'", <http://www.independent.co.uk>, 2014. 08. 19.
- Julio Alonso, "The Story of Spain's Google Tax", 2014. 07. 27. in <https://medium.com/@JulioAlonso>
- OECD (2013),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02719-en>
- OECD (2014),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OECD/G20 BEPS Project, OECD Publishing
- Pierre Lescure, Culture-acte2, Contribution aux politiques culturelles [I]ère numérique. 2013. 5
- Jelegraph, "German 'Google Tax' to force search engines to pay for showing news extracts", 2013. 03. 01.
- The Guardian, "What is the 'Google tax'", 2014. 9. 29., 2014. 10. 31
- The Register, "Google avoids tax with 'Double Irish Dutch Sandwich'", 2012. 11. 22.
- The Sydney Morning Herald(smh.com.au), "Google Australia's tax bill jumps tenfold", 2014. 05. 01



